

인수위 '5+2 광역경제권' 구상 어떤 내용 담았나

# 지역 균형발전·'규모의 경제' 실현

새 정부가 추진할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광역경제권' 구상은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적 행정단위를 새롭게 정해 지역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더 나아가 수도권과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 단위 변경 =인수위는 현 정부와 새 정부 국토균형발전 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략 수행의 기본단위가 행정구역에서 광역경제권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꼽았다.

인수위는 기존 방안의 경우 16개 행정구역단위에 집착하다가 지역 간 사업중복과 소모적 경쟁, 나눠먹기식 관행 등의 비효율을 생산했다고 평가했다.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발전모델을 단순 이식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특화된 발전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간 연계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체계=우선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지역분부는 권역 내 시·도간 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준준 기획조정본부와 인수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수위 브리핑실 앞에서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권본부' 설치 지자체간 협조 유도 지역별 발전 모델 빠져 실효성에 의문

호환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정책·사업 등을 조정하는 한편 권역지원금 배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특정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모두 자율형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본부의 통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는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된다.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국정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

동세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교육자치 등 지역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와 문제점=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역별 발전모델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컸다. 또 권역별 광역본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지자체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광역본부가 끼어들어 육상육 조

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광역경제권본부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는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기구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관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 지역권 일대를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미래 전략인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유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혁신도시 큰 틀 변화없다

공공기관 예정대로 이전...기업도시는 수정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광역발전 정책을 발표한 데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준준 기획조정본부와 위원은 이날 광역발전 정책을 설명하면서 혁신도시는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결과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말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참여정부에서 했던 대로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정된 6개 시범사업의 경우 우도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있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어디까지 왔

나=혁신도시로는 모두 10개가 지정됐다. 이중 5개는 착공한 상태이며 나머지 5개도 올해 상반기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혁신도시중 가장 먼저 착공한 곳은 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작년 9월에 첫 삽을 떴으며 이후 김천, 진주, 광주·전남, 울산 등 5개 혁신도시도 잇따라 착공식을 가졌다.

기업도시의 경우 6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레저형으로는 태안, 무주, 영암·해남이 있으며 이중 태안은 작년말 착공식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직개편·규제개혁 등 힘난

■이명박 號 출항 한 달 앞 남은 과제는

'이명박 號'의 출항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실용주의 정부의 기치를 치켜들고 숨가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온 정권인수 작업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진입한 셈이다. 정권인수 작업의 모험 격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26일로 출범 한달째를 맞는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난 한달여는 정부 개혁을 향해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한 시기였다고 측근들은 입을 모은다. 방만과 비효율로 점철된 '하드웨어'(관료조직)는 물론 국민의 정부 이래 10년간 이어져 온 '소프트웨어'(정책운동기조)에까지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는 구조조정 작업은 간단없이 밀어붙였다는 평가에서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은 엄밀히 말해 아직 '밀그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그리진 구도를 바탕으로 이해갈등의 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이 당선인으로서의 최대 과제다. 조직개편안은 단순히 '규모의 슬림화'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골격을 설계하고 팀을 꾸리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조직개편안 이 과연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당선인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과제는 총리와 조카 인선이다. 함께 호흡을 맞춰나갈 국정파트너들을 어떤 얼굴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초기 국정운영의 흐름과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현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놓

고도 '낙점'을 미룬 채 막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이 가장 애착을 쏟고 있는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규제 만드는 주의의 대표적 케이스가 된 '대불공단 전봇대'를 뽑아냄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부 전반에 퍼져있는 덩어리 규제 수가 무려 5천건이 넘는 등 '규제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개혁을 경제 성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이 당선인으로서 취임전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내 공천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전대표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공정 공천'에 원칙적으로 합의 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은 여전히 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수위 출범 한 달 '집안단속' 부심

일부 위원 '돌출행동'으로 일단 구설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집안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선 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26일 출범한 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차기정부의 '밀그림'을 그려왔으나 일부 직원의 돌출행동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상근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출범 한달째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이보다는 '군기잡기' 차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전문위원의 '언론사 간부 성향 분석 지시' 과 문에 이어 경제2분과 자원위원의 '고액 투자자문' 논란이 이어지면서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차제에 직원들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정'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남은 한달간 '무사고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가 23명의 인수위원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등 수백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

직원인데 특히 55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근자들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전직 장관에서 무직자에 이르기까지 인적구성이 워낙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인수위에 참여하게 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인사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을 하나하나 챙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출범 후 근 한달이 지나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최근 인수위가 총본한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은 실적이 정책들을 발표해 혼란을 유발한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경숙 인수위원장 "정권 교체기 정신적 해이 심각"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정권 교체기에는 상당한 정신적 해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수위 해담분

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규정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정권교체에 불과하지 국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권교체가 원활하게 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무난히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4-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은, 명소를 차지 할 수 있는 곳. 즉, 부귀영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 개인과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명당입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부귀영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명운이 상승하고, 건강과 장수,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명운이 상승하고, 건강과 장수,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은, 명소를 차지 할 수 있는 곳. 즉, 부귀영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 개인과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명당입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부귀영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명운이 상승하고, 건강과 장수,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은, 명소를 차지 할 수 있는 곳. 즉, 부귀영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 개인과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명당입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부귀영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당에 안주하면, 명운이 상승하고, 건강과 장수,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